

# 지역성장거점 역할 부족...“혁신도시 관리지원청 신설해야”

### 10개 혁신도시 예산, 행복도시 6분의 1...사업 전반 총괄 기구 부재 정주여건 개선·주변지역과의 동반성장 위한 자립형 정책 수립 시급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차기 정부로 미뤄진 가운데 혁신도시 주민 삶의 질을 높일 혁신도시 관리지원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21일 오후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코어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혁신도시발전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진행된 주제발표로부터 나왔다.

조선상 동신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혁신특위 광주전남 부위원장)는 '혁신도시관리지원청 신설-국가균형발전-지방소멸의 대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조 교수는 '혁신도시 입주 8년, 건설 12년, 계획 15년'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4만명에 가까워지는

빛가람혁신도시 인구 증가와 재정 증대를 예로 들었다.

먼저 조 교수 자료에 따르면 나주시 지방세는 지난 2011년 393억원에서 기간 입주가 시작된 2014년 477억원, 2017년에는 910억원으로 급증했다. 6년 새 131.6%(517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이 기간 동안 나주시 총 세입규모는 2011년 5642억원에서 2017년 8276억원으로, 46.7%(2634억원) 늘었다.

국가가 지자체에 내어주는 지방교부세는 2014년 2200억원에서 2017년 2719억원으로, 23.6%(519억원) 뛰었다.

2017년 말 기준 인구 1인당 총 예산 규모는 나주

시가 752만원으로, 전남 대형 도시 순천시(434만원)와 광양시(403만원)를 크게 웃돌 뿐더러 광주시(296만원) 보다도 많았다.

이 같은 재정적 성과 속에서도 혁신도시는 70%에 달하는 상가 공실률과 SRF(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를 둘러싼 환경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조 교수는 "혁신도시를 유지한 지자체가 다른 시·군이나 읍·면·동 눈치를 보거나 중앙정부 예산에만 의존한다는 점에서 국가성장거점을 키우려는 의지가 있는 지 되돌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자치분권 강화라는 취지를 위해서도 자립형 혁신도시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수행하는 행복도시건설청(행복청)과 혁신도시 관련 부서 현황을 비교했다.

행복청은 연 평균 예산이 4500억원에 달하며 141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다. 이에 반해 국토교

통부 혁신도시 관련 조직인 혁신도시발전추진단에는 37명이 일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행복도시에 들어간 정부예산이 5조708억원인 반면 10개 혁신도시 예산은 이의 6분의 1 수준인 7988억원으로 나타났다.

행복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는 13곳이 완공되고 10여 곳이 건설 또는 발주 중이지만 비슷한 성격의 나주 빛가람 복합혁신센터는 내년이나 착공할 예정이다.

조 교수는 "행복청은 기본 행정청사나 기반시설(인프라) 건설만 담당하지 않고 있다"며 "마을 공동체를 관리하고 주변지역과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관리지원청 설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원청 본부와 10개 혁신도시별 지원청을 두는 방식이다.

본보기로 삼을 사례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들었다. 이 기관은 2005년 대학연구단지관리사무소로 출발한 뒤 2012년 준정부기관인 재단으로 조직개편했다. 올해 2월 기준 5본부, 6특구본부로 구성됐으며, 직원 159명이 일하고 있다.

강원도가 설립·운영하는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의 경우 출연금 확보 문제와 수도권에 대응하는 성장거점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점을 한계로 꼽았다.

조 교수는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전국적인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은 행복도시와 혁신도시가 함께 골라가도록 해야 한다"며 "그 하나의 방안으로 혁신도시관리지원청을 설립해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주변지역과 동반 성장 등을 추진할 지역성장거점으로 발돋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전KPS, 지역민 현안 개선 아이디어 상생발전 사업으로 추진

### 취업지원 플랫폼 구축 등 6건 2기 시민참여단 활동 마무리

광주·나주시민들로 구성된 '한전KPS 2기 시민참여단'이 5개월 활동을 마무리했다.

한전KPS는 지역밀착형 사회가치 실현을 위한 2기 시민참여단 '함께, 가치'가 지난 20일 활동을 끝냈다고 21일 밝혔다.

지역민들이 낸 우수 아이디어 6건 중 일부는 실제 사업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2기 시민참여단에는 광주·나주에 거주하는 시민 21명이 참여했다.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ESG 전문가 7명도 동참하며 전문성을 높였다.

20~70대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은 자영업자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 회사원, 사회복지사, 대학생 등 직업도 다양했다.

이들은 지난 8월부터 이달 20일까지 5개월 동안 활동을 했다.

참가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회의를 병행하면서 모두 41건의 지역현안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우수 개선안 6건이 뽑혔고, 우수 참여단원 5명에게 포상이 주어졌다.

우수 개선안 가운데 가상공간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기반 취업지원 플랫폼 구축', '어르신 디지털 격차 해소 지원사업',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협약' 등 3개 과제는 우선 사업화 추진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한전KPS는 빛가람주민자치네트워크 '프롬'과 협력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소재로 만든 비품을 쓰는 '노 플라스틱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 한국전력이 시행하고 있는 '전력량 수시 점

검을 통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돌봄'과 '노후 아파트 변질설비 진단 기술지원', '신재생에너지 마을 교육', '학교태양광 시설 및 설치지원-신재생에너지 교육체험장 활용' 등도 우수 개선안에 이름을 올렸다.

시민참여단 1기가 내놓은 '공공기관 멘토링 프로그램'은 올해 5월 시작한 뒤 1년 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전KPS의 주관 아래 나주시·한국전력·한전KDN·전력거래소가 함께 추진하며, 녹색에너지연구원 사업도 수탁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17차례에 걸쳐 전력공기업 직원들이 지역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을 벌였다. 광주·전남 6개 대학 229명이 참여했다.

앞으로 한전KPS는 가상공간 메타버스를 활용해 영역을 넓히고, 지역 공공기관 동참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 고려인마을에 쌀·마스크 기부 한국전력 최영호(왼쪽 네 번째) 상임감사위원은 지난 20일 연말을 맞아 광주시 광산구 고려인 마을을 찾아 쌀과 방역 마스크를 기부했다. <한전 제공>

## 사학연금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로 사회보험 선진화”

### '미래사회의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방안' 포럼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을 활용해 사회보험 선진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각종 칸막이에 막혀있는 공공데이터를 제대로 연계 활용해 3대 공적연금과 4대 사회보험을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지난 16일 개최한 '미래사회의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방안' 포럼에 담겼다.

이날 기조 연설을 한 류근관 통계청장은 각종 공공데이터가 칸막이로 가로막혀 제대로 연계 활용

되지 못함을 지적했다.

류 청장은 최신 암호기법을 적용한 공공데이터로 'K-통계체계'를 완성하면 각종 공공 및 민간 연금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한 '포괄적 연금통계'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통계는 관련 부처에 제공돼 연금정책 개선의 뒷받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럼 참가자들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기관별 실무자의 교류망을 결성해 사회보험협약체 의제발굴에 힘써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사학연금이 이날 나주 분사에서 개최한 포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연구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등 7대 사회보험 연구 협의체'가 공동 주최했다.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기 한국뉴욕주립대 총장과 권오병 경희대 경영대학장이 강연에 나섰다.

주명현 사학연금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보장기관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사회보장의 미래 방향성을 공론화하고 사회보장강화를 위한 기관 간 협력이 있어 사학연금은 그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 aT, 오형완 부사장·기노선 식품수출이사 임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1일 오형완 식품수출이사과 기노선 급식지원처장을 상임이사에 임명했다.

이사 임기는 2년이다.

지난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임이사 평균 연봉은 1억5363만원이었다.

오 이사는 부사장 겸 기획이사, 기 처장은 신임 식품수출이사를 맡았다.

오형완 부사장은 지난 1991년 공사에 입사한 뒤 수출사업처장, 지속가능경영실장, 식품진흥처장 등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식품수출이사를 역임해왔다.

기노선 신임 이사는 1990년 입사한 뒤 유통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급식지원처장 등을 역임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 중!

전기종 -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10년 사용), 가정용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에코EV102**

2인승  
오토바이  
핸들방식

최대속도 50km  
주행거리 10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833만원	303만원	48만원	482만원



**나이스3L (캐노피 1만원)**

적재중량  
200kg

최대속도 47km  
주행거리 9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650만원	330만원	48만원	272만원



**나이스1L**

안전필수  
전복방지(틸팅)  
기능

최대속도 60km  
주행거리 5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본인부담금
462만원	330만원	132만원

**emart 이마트 광주점(광주터미널점) 전시 중!**



친환경전기차 전라남도 대표 생산기업!

**DAEPOONG**

본사·공장: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133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상담 문의

**061) 352-3010 (내선2번)**  
**061) 872-8880, 1**

고 흥 지 사 010-2548-7111  
나 주 대 리 점 010-3626-3848  
장 성 대 리 점 010-2819-3546  
전 남 동 부 권 역 010-2450-1954

광 양 대 리 점 010-5355-1292  
함 평 대 리 점 010-2602-6051  
광 주 · 영 광 010-3925-2181  
전 남 서 부 권 역 010-3647-9709

전국대리점 / 취급점 문의

**010-2034-0141**